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한편, B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정치라고 본다.

- ① A는 학생회 회의에서 급식 잔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지 않는다.
- ② B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③ A에 비해 B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④ B와 달리 A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⑤ A, B 모두 국회가 국회 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었던 ‘인치(人治)’를 대신하여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法治)’가 나타났다. 그러나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건들을 겪은 뒤 A만으로는 민주주의나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각성이 있었다. 단순히 ‘사람이 아닌 법’만으로는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정의에 합치되지 않은 법률은 법으로서의 본질을 결여한 것임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 절차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갖는 B를 요구하게 되었다.

- ① A는 입법자에 의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에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는 국가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존재만을 요구할 뿐 그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 ③ A와 달리 B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B와 달리 A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⑤ B와 달리 A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므로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3. (가)~(다)는 기본권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 조항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가진다.

- ① (가)에 규정된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이다.
- ② (나)에 규정된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③ (다)에 규정된 기본권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 ④ (나)와 달리 (다)에 규정된 기본권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⑤ (다)와 달리 (가)에 규정된 기본권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 아래 A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9조에서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 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②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는 근거가 된다.
- ③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 ④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를 보호·지원하는 근거가 된다.
- ⑤ 국가가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고,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만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A로 보이지만, A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가) 등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의 요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기 때문에 B와도 구분됩니다.

- ① A에서는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 ② B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 ③ A와 달리 B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 받는다.
- ④ B와 달리 A에서는 의회 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내각의 각료가 될 수 있다.
- ⑤ (가)에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들어갈 수 있다.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 ○○ 시민 단체는 정부에 환경 관련 ㉡ 정책안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제안된 정책안을 반영하여 수립된 ㉢ □□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시행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 다양한 평가가 나타났다. 이후 ○○ 시민 단체는 시민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 보완된 정책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 정책이 수정·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① ㉠은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 ② ㉡과 달리 ㉢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 ③ ㉢과 달리 ㉡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정치 외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 ④ 언론은 정치 과정에서 ㉣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과 달리 ㉣은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이 경유차 소유자인 갑에게 □□법에 따라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하자, 갑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갑은 소송 계속 중 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에 (가)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B에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나) 을/를 청구하였다. 이에 B는 해당 법률 조항이 국가에게 부여된 환경 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은 없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① A는 갑의 제청 신청 없이는 B에 (가)를 제청할 수 없다.
- ② 갑이 청구한 (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된다.
- ④ B는 해당 법률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⑤ B의 장(長)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8.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와 B는 모두 대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제도인 공직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A는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하여금 구성원에게 유리한 정책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B와 구분된다. B는 공직 선거에서 보다 많은 표를 얻고자 일반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가 집약된 정책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만, A는 공공의 이익보다 구성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공약을 지지한다.

- ① A는 당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 ② B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③ A와 달리 B는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국정 감사권을 가진다.
- ④ B와 달리 A는 공직 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⑤ A, B 모두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다.

9.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한 후, B의 장(長)과 C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이후 D에 의해 임명된 B의 장(長)은 갑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하고, 을을 정당 해산 심판을 담당하는 E의 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한편, D를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C는 D에게 ○○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였다.

- ① A는 E의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 ② B의 장(長)은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③ C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정 조사권을 가진다.
- ④ 국무 위원은 C의 제청으로 A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 ⑤ D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C는 이 문서에 부서한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남)과 을(여)이 결혼식을 하고 혼인 신고 없이 함께 살던 중 갑과 을 사이에서 A가 태어났다. 그 후 갑과 을은 다툼이 잦아져서 헤어지기로 하였고, A는 갑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을은 갑과 헤어진 후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하였다. 이후 을과 병 사이에서 B가 태어났다. 또한 을과 병은 혈연관계가 없는 미성년자 C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한편, 갑도 을과 헤어진 후 정과 법률상 혼인을 하였다. 그 후 갑과 정은 혈연관계가 없는 성년자 D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자로 입양하였다.

- ① 갑과 을 사이에서는 친족 관계가 형성되었다가 해소되었다.
- ② A는 갑과 을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B는 을과 병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각각 인정된다.
- ③ C는 입양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유지된다.
- ④ 갑, 정 모두 D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D를 대리할 수 있는 친권자로서의 권한은 없다.
- ⑤ D는 자신의 친생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친생부모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11.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답변으로 옳은 것은?

교사: 다음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가정할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법적 판단에 대해 말해 보세요.

갑(17세)은 을이 운영하는 전자 대리점에서 고가의 노트북 할인 행사를 보고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면서, 노트북의 수령과 대금 지급은 다음날에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을은 다음날이 되어서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학생: _____ (가)

- ①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병의 동의를 얻어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을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갑이 노트북을 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④ 병이 을에게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을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⑤ 병이 을에게 계약을 추인한 후 갑이 을로부터 노트북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2. 민법의 기본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깨트린 자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언을 기초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법적 가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책임의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 을/를 채택하여,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위험한 시설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고, 이러한 기업이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기업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에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위험도 부담한다.'는 법언에 따라 가해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나) 이/가 등장하였다.

- ① (가)에 의하면,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뛰어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작물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가)가 적용된다.
- ③ (나)에 의하면, 개인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가 인정되어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④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그 동물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나)가 적용된다.
- ⑤ (가)와 달리 (나)는 경제적 강자인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13.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민법, 형법 중 하나임.)

갑은 길을 걷다가 읊과 시비가 붙어 다툼 끝에 을을 때렸고, 이로 인해 을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을은 갑의 구타 행위가 A에 규정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갑을 수사 기관에 고소하였다. 또한 을은 갑에게 B에 규정된 불법 행위 책임을 주장하면서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보기>

- ㄱ. A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지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
- ㄴ. B는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과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私法)에 해당한다.
- ㄷ. A와 달리 B는 타인의 물건을 훔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 ㄹ. A, B 모두 사회 구성원에게 행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재판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범죄가 성립하려면 A, B, C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표는 각 사례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나타낸다.

사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갑(12세)이 장난으로 옆집의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하였다.	갑의 행위는 A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30세)은 범죄 현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였다.	을의 행위는 B가 인정되나 C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병(45세)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가)
(나)	정의 행위는 A, B, C가 모두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한다.

- ① A는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 ②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A가 조각되는 사유이다.
- ③ B가 인정되는 행위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당 행위로서 C가 조각된다.
- ④ (가)에 '병의 행위는 B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정(19세)이 이유 없이 돌을 던져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켰다.'가 들어갈 수 있다.

1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 식품 회사 직원인 갑은 상품 절취, 위생 관련 복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갑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갑의 구제신청은 기각되었다. 한편, A 식품 회사 직원인 을은 A 식품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식품 회사 노동조합은 을에 대한 해고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A 식품 회사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인용되었다.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갑과 사용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갑과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 ①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 ② A 식품 회사 노동조합과 달리 을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중앙 노동 위원회는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 노동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 ④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은 동일하다.
- ⑤ 중앙 노동 위원회가 갑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갑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갑과 을 모두에 대해 검사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판사는 을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후 갑과 을 모두 기소되었으며, 을만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갑뿐만 아니라 을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고, 을도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① 갑이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청구하여 갑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졌다.
- ② 검사가 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사전에 발부한 체포 영장이 필요하다.
- ③ 1심 재판 중 을은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1심 법원은 을에게 2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⑤ 판결이 확정된 후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7.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이며, 각 국가들은 자신의 보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전쟁이 유발되므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을: 국제 사회는 국제기구와 국제법 등을 통해 국가 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국가 간 권력 관계보다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인 선(善)을 추구하는 국제 규범의 역할을 강조한다.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보다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의 관점 모두 국제 사회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적 설득보다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A가 운영하는 이삿짐업체에 고용된 직원이고, 을은 B가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다. A는 병으로부터 이삿짐 운반을 의뢰받았다. 갑은 A의 지시로 화물차에 병을 태우고 이삿짐을 운반하던 중,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던 을과 도로에서 끼어들기 사고가 발생했다. 갑과 을은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경쟁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켜 건너던 정을 동시에 치었다. 이 사고로 병과 정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병의 이삿짐이 파손되었다.

<보기>

- ㄱ. 을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B는 정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ㄴ. 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아닌 A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A의 병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병은 A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ㄹ. B의 정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을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9. 다음 자료는 서술형 평가 문항 및 답안에 대한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중 하나임.)

[문항]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을 3가지만 서술하시오. (각 서술별로 채점하며, 옳은 서술 1개당 1점, 총 3점임.)

- [답안] ○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체결·비준권을 가진다.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 (가)

채점 결과

2점

- ① A는 명시적 입법 절차를 거쳐 성문화된 형식으로만 존재한다.
- ② 국내 문제 불간섭은 A가 아닌 B에 해당한다.
- ③ A와 달리 B는 국가를 초월한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된다.
- ④ B와 달리 A는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 ⑤ (가)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8명으로,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가 동일한 8개의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제로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갑국은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4개 선거구(가 1~가 4)는 '가 지역'에, 4개 선거구(나 1~나 4)는 '나 지역'에 있다. 표는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별 득표율을 나타낸다.

(단위: %)

선거구 \ 정당	A당	B당	C당	D당
가 1	40	20	5	35
가 2	40	15	15	30
가 3	65	20	10	5
가 4	55	25	10	10
나 1	15	15	30	40
나 2	5	30	25	40
나 3	10	15	25	50
나 4	30	20	0	50

* 정당은 A당~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갑국은 차기 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거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 제도 개편안 검토 시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한다.

<1안>	선거구 가 1~가 2, 가 3~가 4, 나 1~나 2, 나 3~나 4를 통합하여 선거구를 4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선거구별로 2인이 당선 가능한 경우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1인을 공천한다.
<2안>	'가 지역'과 '나 지역'을 각각 1개의 선거구로 만들고, 각 선거구에서 4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유권자는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해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행사하며, 각 선거구별 의석을 해당 선거구 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다. 각 선거구의 정당 득표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 선거 제도 개편 전후 유권자의 지지 정당은 변함이 없으며, <2안>의 경우 유권자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정당 투표함.

- ① 현행에서 A당과 D당은 모두 과대 대표되고, <2안> 적용 시 B당과 C당은 모두 과대 대표된다.
- ② <2안> 적용 시 A당의 '가 지역' 의석수는 D당의 '나 지역' 의석수보다 많다.
- ③ <2안> 적용 시 D당의 총의석률은 정당 전국 득표율과 일치한다.
- ④ A당은 <1안> 적용 시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와 <2안> 적용 시 얻을 수 있는 총의석수가 동일하다.
- ⑤ B당은 <1안>보다 <2안> 적용이 유리하고, C당은 <1안>, <2안> 모두 현행보다 유리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